

제1주제 토론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방안

발표자 : 임 성 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 박 원 표 (한남대학교 교수)

토론자 : 김 성 태 (청주대 교수)

박 상 우 (상주대 교수)

전 상 경 (동아대 교수)

이 삼 결 (행정자치부 재정과장)

서 효 원 (구리시 부시장)

이 강 철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 박원표(사회자)

먼저 순서에 의해 김성태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태 교수(청주대학교)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와 계신 예산 부서 담당관이나 실무자들이 앞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드 매뉴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반 지방재정 압박의 현황이나 원인분석을 잘 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잘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 건전성의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혁은 크게 틀 자체 개혁과 틀 내의 개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방자치제, 더 크게 보면 지방분권화가 중요합니다. 지방분권화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습니다만 효율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 모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중앙집권화에 비해서 지방분권화는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정보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전부 파악될 수도 없고, 지방 내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방이 잘 알기 때문에 정보의 분권에 의한 효율성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분권화,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전 재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는 불과 3~4년 전에 IMF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를 졸업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현재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IMF 위기에서 벗어났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건전 재정을 운영해 왔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만약 당시에 우리가 어느 남미 국가와 같이 재정마저도 불건전하였다고 하면 아마도 그 위기에서 빠져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금융의 위기를 우리는 건전 재정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그것은 중앙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이 건전 재정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야 하며 이는 국가 위기관리나 혹은 지방의 자치단체 위기 관리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좀더 부각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보기에 는 틀 자체를 바꾸는 제도 개혁 부분이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있는 틀 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틀 내의 개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중앙정부의 사무라든가, 혹은 행정·재정에 있어서의 권리를 지방에 많이 위임·이양시키려고 하고 또 법이나 제도 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봐서는 걸으로는 많은 것이 위임된다고 합니다만 거기에는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에 있어서의 권한과 책무가 함께 옮겨 줘야 되는데 책임성은 많이 이양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인 권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많은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그 권한에 따른 책무성, 어카운트 빌리티, 책임성을 우리가 또 물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또 어떤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현행 제도의 틀을 지방 재정의 운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작성하고, 정리하고, 공개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항상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재정 분석이나 지방재정 진단 제도를 일각에서는 잘못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형태로든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 는 만약에 어떤 정보, 즉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정보가 빨리 만들어지고, 그것이 공개되고, 또 전부 다 공유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 현행 선거제나 기타의 확인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너무 선부르게 중앙정부가 어떤 제도로 다시 옮겨매려고 한다면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 박사님이 주장하신 예산회계 제도의 정비,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 그 다음에 재정 통계제도의 정비, 통합재정 제도의 정비, 그 다음에 재정 정보 전산 시스템, 이 모든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보에 관한 작성과 공유, 공개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원표(사회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토론은 박상우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박상우 교수(상주대학교)

임 박사님 논문은 아주 방대한 논문이었고, 공부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21세기는 「세방화」라고 해서 세계화, 지방화,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이런 단어들 이 논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화 문제가 되색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세방화」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인식에서인지 최근 들어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9월에는 지방분권화 운동본부가 결성되기도 했고, 또한 자치현장 제정이 합의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비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지방 포럼이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방자치제를 한다, 지방분권화를 한다 하더라도 지방재정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태 하에서는 이 모든 것이 공염불이 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서 저와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빼고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논문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듯한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인 불균형, 이것은 이전재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간의 수평적인 불균형, 그러니까 대규모의 공단을 끼고 있는 지역과 농촌지역, 특히 이 지역들은 수평적인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화되고 있는데 모든 기준들을 획일적으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라고 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리라고는 절대로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원을 단순 이양시킴으로 해서 지역간의 수평적인 불균형이 보다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만약에 여쭙 보신다면 아직까지 답은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획일적인 기준의 적용만큼은 우리가 신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방정부마다 경기 순환적인 재정위기를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상주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곳 학교로 오기 전까지는 대구에서 주로 있었기 때문에 대구시의 경제개발계획에도 한번 참여했습니다. 경기 순환에 따라서 세수 위기가 매우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짚어볼 때 우리가 지방재정을 이야기할 때는 그 뿌리부터, 다시 말하면 지역경제라고 하는 이 체질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방재정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선행해서 지역경제를 어떻게 특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어떻게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에 제가 농협에서 하는 컨설팅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유통센터 같은 것을 통해서 농촌지역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면 자체적으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 볼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볼 때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재정진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이 건전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첫번째 지역경제와 연관해서 말씀드린 것이 규모라고 한다면, 지역재정은 규모·운영·진단, 이 세 가지 축이 제대로 돌아갈 때 과연 재정 자체가 건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재정진단을 주기적으로 한번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자산·부채관리제도라든지, 아니면 소위 일반 민간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 벨리어 리스크 같은 바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재정도 리스크 관리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의 상황 변화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요인이든, 비경제적 요인이든 간에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열거를 해놓고 그 하나 하나의 어떤 상황이 변화했을 경우에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지방정부나 또는 중앙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하나의 상황변화에 따른 대처 매뉴얼, 이것을 한번 작성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수요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지출에 대한 파악, 그 다음에 수입에 대한 파악, 이런 것들도 시나리오로 한번 만들어 보면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박원표(사회자)

다음은 전상경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 전상경 교수(동아대학교)

임성일 박사님께서 워낙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해오셨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아주 방대하게 요약해 주셔서 상당히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워낙 주제가 광활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식부기제도에 관한 것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잘 나타내 줄 수 있고,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임성일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지방정부 복식부기 제도의 도입에 관한 그런 연구를 꼭 책임지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다른 모든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만두고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대학의 커리큘럼을 보면 정부 회계에 관한 그런 강의가 그렇게 많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일선의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정부 회계에 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복식부기 제도에 대한 시범 연구는 서울의 강남구와 경기도 부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를 모델 케이스로 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다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성공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04년, 2005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할 때 서울의 강남구가 차지하는 위상이라든지, 근방에 있는 경기도의 도시가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을 가지고 검증을 해서 성공적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려고 밀어붙이는 것이 옳느냐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 재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일본에서 공부하는 하지 않았지만 워낙 일본 제도의 영향이 커서 우리나라 지방 재정의 실상을 좀더 진실성 있게 알기 위해서 일본 문헌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회계예산 제도에 관한 한 세계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발생주의 도입에 대한 논의로부터 최소 7년 이상이 걸렸고,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재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일본의 경우 1980년대 말 이후 이에 대한 꾸준한 논의와 일부 자치단체에서 나온 미에겐인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한 부분적인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정부제도로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일본 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식부기 회계 제도는 일본이 왜 안하고 있는 것일까. 일본 것을 본받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일본에서 이렇게 1980년대 이후로 왜 못하고 있는가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현재도 현금주의 제도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분석이라든지, 재정 건전 상황에 대해서 지표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몇 군데 해 보고 상당히 성공적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시기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상당한 부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가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부기 작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계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것에 아마 상당한 부분의 용역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거대한 기업집단의 큰 어떤 시장이 지방자치단체로 엄청난 큰 시장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계 같은 곳에서 좀더 인프라를 구축해서 점진적으로 연구를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는 열심히 하시되 이것을 집행하는 데는 조금 시간을 많이 갖도록 그런 내용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원표(사회자)

다음은 이삼걸 과장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 이삼걸 과장(행자부 재정과)

임 박사께서 지방재정 건전화에 관련되는 부분은 전부 다 언급하셨는데 완전히 이해 안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얘기는 각 분야에 계신 여러 분들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산을 보더라도 보는 위치에 따라서 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보느냐, 또 가까이서 보느냐 멀리서 보느냐, 이런 차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런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앙에서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큰 화두로 생각되는 것은 첫째, 지방재정력이 상당히 약하다, 취약하다 하는 것인데 이는 상태 면에서 봤을 때, 소위 우리 기업에서 얘기하면 BIS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전국에 248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그 중에 광역 16개 빼면 기초단체이며, 또 기초도 기초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는 일반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상이며 따라서 얘기를 하기에다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력을 떠나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건전성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오늘 이 초점은 건전성 운영 측면인데 그것을 항상 얘기하면서 재정력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결론은 돈이 없어서, 지금 뭐니뭐니해도 ‘머니’가 있어야 내가 뭐를 할 것 아니냐고 전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모든 문제점이 돈이 없어, 제도가 안된다는 식입니다. 우리가 조금 방향을 달리 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건전성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가령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월급을 어떤 사람은 그 옆 동 사람보다 2배를 더 많이 탄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제로 생활하는 수준은 보면 거의 비슷하게 애들 학교 보내고 하는 것을 보면 뭔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이 꼭 많다, 적다 보다는 어떻게 쓰느냐, 수입을 어떤 식으로 또 모으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권한과 책임을 같이 받는 것인데, 또 그 중에 재정에 관한 권한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를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 틀인데 권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책임 문제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 세입 같은 경우에 소위 중앙에서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오는 것이 쉽지, 체납된 체납세 거둬들이는 데 노력하는 것은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체장을 전부 선거에 의해서 뽑다 보니까 억지로 그것을 압류해서 경매처분하고 하면 안 좋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세외수입도 얘기를 하는데, 세외수입은 원 목적이 재정적인 수입은 아닙니다.

세외수입은 원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수익자한테 부담시키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국가가 물가관리 측면에서 세외수입을 통제한 면도 있지만,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올리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방자치라고 하면 만약 지방자치를 잘못 운영을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은 주민들과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대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야 진짜 지방자치가 됩니다.

무슨 얘기나 하면 지방재정 운영을 몇 년 잘못하면 우리 군의 공무원 월급은 상대방 군의 월급보다 반으로 깎일 수도 있다, 주민들은 저쪽 옆에 사는 사람들은 재산세를 100을 내는데 우리는 200을 내야 될 처지에 있다, 이것을 인식해야 그때부터 자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런 인식 측면에서는 조금 공유가 되는 정도의 과정이지 완전히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월급 체계를 보면 몇 급, 몇 호봉 하면 다 똑같다 보니까, 물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운영 측면에서도 우리 스스로 의식과 인식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뒤에서 제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지방자치라는 것은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살림살이를 잘못 살면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이것은 잘됐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알기 쉬운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서 던져준다고, 결산서 던져준다고, 이것이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곧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우리 중앙 관청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재정 분석제도와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제도를 전산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분석자료가 상대방과 비교가 되어야 되고, 또 시기적으로 과거와 지금이 어떻게 틀려졌는지를 나타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민선자치하고 난 뒤에 제일 많이 말이 많은 것이 행사를 많이 한다, 행사를 많이 하면 A군에서 우리 단체장이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 행사는 몇 건을 했고 돈을 얼마나 썼느냐, 과거에 비해서는 얼마를 더 썼고, 또 옆에 비슷한 군보다는 얼마를 더 썼느냐, 그 비교 자료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업을 해서 그 군이나 시의 장래에 도움이 조금 덜 되는 것, 그리고 그 어떤 사업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분석해서 어떻게 소규모로 분산이 돼서 투자가 되었고 이루어져 왔느냐, 이런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전산화 문제와 재정분석·진단제도입니다. 보완할 것도 많고 합시다만 지금 출발단계지만 앞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상경 교수님이 복식부기 문제도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중앙 정부 입장에서 할 얘기는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중앙 관점으로 봐서는 우리가 할 일은 체계에 대해서

는 쪽 얘기하려고 하면 많이 있습니다.

대개 중앙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방에서는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하는 역할이 투·용자 심사니, 안 그러면 지방채 발행 승인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통제 측면으로 보면 그런 문제는 사실은 지방자치 원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얘기했지만 지방에서 자치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관료가 일을 하고, 지방의회에서는 그것을 견제를 하고, 또 그 지방의회 의원들을 뒤에서 주민들이 감시하는 등의 소위 스스로에 의한, 주민에 의한 통제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의 지방자치가 발전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대부분 그렇게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잘 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는 상황 하에서 중앙의 어떤 관여, 이것은 보완적인 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가장 바람직하고 언제까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중앙에 대해서,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원표(사회자)

다음은 서효원 부시장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 서효원 부시장(구리시)

임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좀 견해가 다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예로서 웅진군의 1인당 자체 세입액이 부산 북구의 17배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계에서 지방재정을 비교·분석할 때 광역 자치단체인 광역시, 특별시, 도를 한 묶음으로, 그리고 기초인 시·군 자치구를 다른 한 묶음으로 이렇게 분석하는데 이것도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방자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광역과 기초가 분담하고 있는데 그 분담률이 도 지역과 광역시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100으로 봤을 때 도가 30을 수행한다면 시나 군은 70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광역시의 경우, 광역시 본청은 한 80을 수행하는데 자치구는 20밖에 수행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의 업무는 자치구의 업무보다 약 3배정도 일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 구조도 다릅니다.

시·군세는 10개나 되고, 자치구세는 세원이 빈약한 세목이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하고 자치구는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내년도 지방재정을 전 자치단체를 분석해서 발표할 때도 시·도

와 시·군·구를 이렇게 2개 분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를 한 묶음, 도·시·군·자치구로 해서 5개 분야로 이렇게 발표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확충을 위하여 10년 전부터 항상 학계에서 주장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10년이 지난 지금에 수수료나 사용료의 현실화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수수료는 일부 중앙부처의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는 대부분 자치단체 조례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학계에서 아무리 주장을 하고 행정부에서 강조를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하는 중앙부처에서는 개별 법령을 개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를 제외한 중앙부처는 지방의 재정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귀찮은데 무엇 하러 법령을 개정합니까?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여기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선거직 공무원들은 당선되는 날부터 4년 후의 선거를 또 의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사용료를 높이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현재 지방교부세 산정을 할 때는 기준재정 수요액을 뺀 부족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사용료를 10억을 확충하면 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약 8억 정도의 교부세를 감액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에서는 수수료의 현실화, 그 다음에 각계 현실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지금 중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별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율을 이번처럼 행정자치부에서 통합해 가지고 시행령으로 규정을 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지방의 자율성을 위해서는 지방세에 과세권을 줘야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의 자율성을 줬을 때 지방세를 높이는 시장, 군수는 전국에서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사용료까지는 중앙에서 못하지만 적어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통합해서 시행령으로 규정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 제도를 하고 있는데 자체 심사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인근 시·군과 합쳐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투·융자 심사 중에 자체 심사는 전혀 효과가 없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투·융자 심사의 심사위원장이 부단체장이고, 그 위원들은 단체장이 지정한 사람들입니다.

임 박사님은 전문성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단체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체장이 지정하는 위원들이 반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직업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분위기는 핵심이 인사권입니다. 현재 인사권은,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부단체장이 대

부분 인사권 행사를 하고 단체장은 사인만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단체장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장이 100% 합니다.

왜냐하면 부단체장 자체를 단체장이 임명을 하고, 기초인 경우는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면 부단체장은 몇 개월만에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광역인 경우는 부단체장들이 1급이기 때문에 바로 단체장이 필요 없다고 하면 바로 나가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부단체장을 임기제로 해야 됩니다.

실제로 유럽에는 임기제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임기제를 한 2년 정도 해서 단체장하고 마음이 맞으면 한번 더 해서 4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임기제를 한다면 부단체장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어 지방재정도 건전화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복식부기 도입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많은 논의를 하셨지만 앞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복식부기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능력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범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고, 계속적으로 보완을 한 다음에 충분히 자신이 있을 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통합재정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채를 알아보면 서울특별시의 부채가 작년 말에 한 2,000억으로서 규모가 작은 광주나 대전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지하철 공사의 부채를 합하면 서울시가 전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 이 수지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통합재정 수지제도 도입은 단순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공사·공단의 부채까지도 같이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원표(사회자)

다음은 이강철 의원님께서 토론해 해 주시겠습니다.

○ 이강철 시의회의원(대전광역시)

저는 4~5년째 한번도 빠지지 않고 지방재정 세미나에 참석을 해 왔습니다. 물론 일정 정도의 성과도 있었고, 또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한 전문지식도 얻었습니다. 또 시정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도 한 500여명이 왔는데, 재정 전문가들, 현재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분들,

또 의회 의원들이 함께 했던 수많은 건의와 제안에 대해서 재정을 실질적으로 틀어쥐고 있는 중앙정부의 답변이 항상 똑같고 진부해 실망 또한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만큼은'이라는 실낱 같은 기대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 국가의 미래를 정말 진지하게 머리 맞대고 고민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패러다임, 즉 국가재정 운영 시스템에 대한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의 시대인 21세기는 국가간 경쟁 체제에서 도시간, 지역간 경쟁체제로 전이되어 가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역화, 지방화가 국가 경쟁력의 요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김준영 한국재정학회회장의 격려사에서도 나왔듯이 지금까지 국가 발전이 중앙 주도적인 과정이었다면 21세기 국가 발전의 동력은 분권화된 지역의 균형된 발전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하고 특화된, 그리고 차별화된, 그리하여 자생력을 갖춘 건강한 지역의 토대 위에 21세기 강력한 국가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요체인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자율성이 반드시 제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토론자로서의 견해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아쉬움은 임성일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또 이 부분은 제도의 적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바로 시행하면 저는 되리라고 봐 집니다.

예산상으로 봐도 엄청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요소가 없기 때문에, 또 지금 행정자치부의 재정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또 제도 자체가 좋은 것이 많았습니다.

다만 오늘 재정에 관련된 전문적 식견과 견해는 재정전문가인 다른 토론자들이 모두 말씀하신 것 같아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삼걸 과장님과 서효원 부시장님과의 견해 차이가 너무 커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한정된 지방재정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의 현재 갖고 있는 틀, 그 한도 내에서의 건전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저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방안이었다고 생각하고, 본의원도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반영시켜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재정의 현황 및 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자율성 확보는 결국은 지방재정을 틀어쥐고 있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구조를 새시대 변화에 맞게 뜯어 고쳐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따지거나 싸우러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과세권의 이양 등 몇 가지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세권의 이양 등 우리 지방재정 확충 및 독립에 부정적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입장은 지금도 토론자 입장의 답변을 들으셨지만 지방의 재정 운영 능력을 가장 큰 이유로 지방의 재정 운영능력이 없다는 얘기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국가 정책을 지켜봤듯이 오히려 중앙정부의 재정 운영 상태가 낙제점을 면키 어려울 정도로 방만하고 관리도 부실했음이 몇 몇 대형 국책사업의 사례만 봐도 쉽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성일 박사님의 논문 결론에서 밝힌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오늘 제안된 내용들을 중요한 인식의 발판으로 삼고 상호 수평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서 협력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오늘 제안된 내용들이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현재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그릇을 키워야 되겠는데 먼저 세수보전 대책 없는 비과세 지정 및 세금 감면 확대가 자제되어야 된다고 봐 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확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과세 지정 및 지방세 감면제도가 너무 과도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역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지정 받은 비과세 및 감면현황이 총 37만 건, 1,23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보전대책이 전혀 없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비과세 지정 및 세금 감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정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 및 재정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조세권의 과감한 이양을 통한 재정의 분권 실현입니다.

현실적으로 재정의 뒷받침 없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비중이 20%에 불과해서 2할 자치로 표현되는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국세와 지방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지방세원을 대폭 확충해야 되는데 특히 국세 중 해당 지역과 관련이 깊은 전화세, 양도소득세, 인지세, 주세, 특별소비세 등을 먼저 지방세로 과감하게 전환해서 지방세의 비중을 끌어올려 자주재정을 확보해 줌으로써 자치단체가 고객 만족을 지향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중앙정부는 감사·감독 기능을 확대하는 등 정책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매출 공채의 이율 인하를 건의 드립니다.

지역개발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현재 저금리 시대 속에 현행 매출공채의 상환율이 연리 6% 복리로 시중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 수요 충족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현행 이율을 인하할 경우에도 행정 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사업은 신중하게 처리하되 매출공채의 이율 등 운영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발행 주체에게 자율적이며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승인 제도의 완화가 요망됩니다.

○ 박원표(사회자)

여섯 분의 열띤 질문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 박사님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일 박사(발표자)

첫번째, 김성태 박사님이 좋은 논평과 나름대로 많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재정 부분의 건전화에 따른 부분은 어떤 행태로든지 외국과 비교할 때 좋은 기초를 이루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재정 분석·진단에 대해서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원리에 맞게끔 잘 지적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특별히 자치시대의 자율과 권한,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평가 시스템, 이 부분이 사실은 매우 기초적이지만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우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언급하자면 아까 저도 수평적인 재정 불균형의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박 교수님께서도 획일적인 적용 대신에 사실은 자치제와 자치제간의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이 삼걸 과장님도 나중에 248개가 어떻게 보면 개별 주체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분화된 연구와 정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말씀 나온 바에 대한 고민 중의 하나가 지방재정 대 국가재정을 볼 때 이것이 경기 변환에 관련되는 부분이나, 소위 이론적으로는 시크니컬한 부분이나,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외환 위기 이후에 이것이 시크니컬한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 것이냐, 이것을 제일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 교수님이 아까 좋은 아이디어를 넘겨 주신 것처럼 상주시에 계시니까 상주시에서도 어떤 그런 스트럭춰한 것인지, 경기 수능적인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도 전국적인 좋은 귀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전 교수님에게는 할 말씀이 많습니다.

아까 저한테 찾는 데 매우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도 말씀하실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복식부기에 대해서 전 교수님이 지적하신 바는 정확한 지적이시고, 저도 100% 수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옆에서 인용하신 일본의 경우에 저도 주를 달 때는 외국에서도 이러저러한 완충과 우리보다 더 먼저 갔던 나라들이 조심 조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노파심에서 제가 주를 달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 기준은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출발할 때는 회계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 와서는 동경도 도시사를 비롯해서 여러 현에서 복식부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 위기가 나오는 것을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예산회계에 나오는 것처럼 위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본도 제가 알고 있기는 대장성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복식부기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은 상당히 학술적인 부분입니다만 발생주의 복식부기와 기존 복식부기하고는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예산도 발생주의이고, 결산도, 회계도 발생주의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단계에서 출발점에 서 가지고 많은 회계를 하시는 분들이 기왕 시작할 때 발생주의의 복식부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관점입니다만 이 부분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 고민이 여러 가지 계시는데 문제는 전산정보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현업에 계시는 분이 복식부기의 개념을 몰라도 현재의 예산회계 시스템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부기가 되고, 재무재표로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만난 일반 민간회사의 분들도 재경부가 갖고 있는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 「살림이」를 쓰면서, 「살림이」는 일반 우리 현행 단식부기 예산이라는 점을 말했습니다. 또 그것을 쳐 넣으면 그 정보시스템에서 복식부기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는 그와 같이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업무의 중복성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부분이고, 이는 정부 정책에서도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합을 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까 2005년이다, 이렇게 못박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서효원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매우 신중해야 될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회계 제도가 한번 바뀌면 전체가 바뀌는 것이고, 잘못되면 사회적으로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산할 때에도 3분의 1을 할 수도 있고, 5분의 1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와 같은 부분들은 정부쪽에서 아직 진단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 참여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 쪽에서 회계를 구분하더라도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소위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 있느냐 부터 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등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고, 아까 지적하신 정보제공 부분은 정보는 쌍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정보가 객관적이고, 상대 비교를 할 때 누가 보더라도 상식의 합리성을 갖고 있는 정보가 중앙과 지방에 주어지고, 지방과 지방간에, 또 지방과 주민간에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주어지도록 개선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또 서 시장님은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웅진군과 나와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그냥 통계적으로 극단적인 부분을 얘기하셨고, 여기에 기능이든지, 재정 세입의 구조는 반영된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자부에 지금 예산 분석에 나온 부분하고 서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역과 구분해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단일 도표화가 되어야 된다고 문건에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교부세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학자의 계열에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매크로한 부분을 볼 때 결국 여기에서 새로운 세원을 끄집어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주민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형평과 효율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이 제일 좋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강철 의원님,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코멘트는 못 드리고, 단지 말씀하신 부분이 지방의 시각에서 몇 번씩 강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반향이 오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정당하게 조정되는 것도 우리 사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원표(사회자)

그러면 플로어에서 의견이나 물어보실 부분이 있으면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재우 시의회의원(논산시)

지방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9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다가 점점 내려와서 총 세입하고 대비를 했을 적에 4.8%까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까 서효원 부시장님께서도 이렇게 대비하셨듯이 가령 구라든가, 또는 시나 군, 각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임 박사님께서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지방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국가 예산이나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는 그야말로 소규모이지만 저도 우리 시의 재정 투·융자 심의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를 해 보면 저만 어떤 이유를 묻고, 발언을 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서효원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 건설도시국장, 총무국장, 또 심지어는 시의 새마을 부녀회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분들이 과연 반대를 하겠어요? 토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언제 기회가 있으시면 논산시에 의회를 해서 투·융자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물론 금년 정례회에서 예산을 11월달, 12월달에 다루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은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액수에 대해서는 저는 투·융자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붙이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도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가령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재정학·경제학 교수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실질적인 심사가 되고, 그것이 공표가 돼서 정말 투자를 할 곳에 투자를 했는가 여러 시민이나 일반에게 알려져야지 그냥 그렇게 상황실이라든가, 부시장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 불러서 하면 사실은 하나마나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정문 시의회의원(광양시)

조세권 이양 등 여러 가지 지방세수 확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지금 소위 말해서 3~4만 규모의 기초자치단체, 이 자치단체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재정확충 방안이 제고되고 정부 지원책이 마련되겠지만, 이 3~4만 규모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재정확충을 통해서 자치단체에 걸 맞는, 그리고

오늘 주제가 지역 균형발전입니다만 이웃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같은 복지시설, 여러 가지 사회 간접시설을 이루어가면서 균형발전의 틀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합니다만 이는 정치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이나 재정적 측면에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양여금 등의 지원사업비와 꼬리표를 달고 내려오는 각종 지원자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실질적으로 해 보면 정부가 지원하는, 즉 다시 말해서 꼬리표를 달고 내려오는 각종 사업 자금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낭비적 요소가 많은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삭감하고자 의견을 냈을 때, 주로 집행부나 공무원들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이 예산을,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 얻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여기다가 칼을 들이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곤란을 겪는 그런 점들이 많습니다.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각기 다르다고 봅니다.

농업을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 우리 광양시 같은 공업과 농업이 같이 병행되는 그런 자치단체, 관광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될 자치단체 등 서로 조건을 달리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꼬리표를 달고 내려오는 이런 예산들을 과감하게 그 자치단체 재량권에 맡겨서 자치단체 환경과 여건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정책 입안 과정부터 집행 과정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제대로 쓰여졌는가 하는 관리 시스템을 적용시켜 나가는 이런 방안이 제시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임채옥 기획예산과장(김해시)

오늘 지방재정 운영 면에서 건전 재정을 논하셨는데 사실상 세출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주고,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승인하고, 또 투·융자 심사, 지방채 승인 등이 각종 중앙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 문제는 지방재정이 튼튼하려면 규모가 확대되고, 재원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현재 국세의 지방세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방교부세는 현재 15%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각종 보조사업 정부 지원율을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 참 골치 아픈 일입니다.

도리어 국가에서 보조비율을 높여야 할텐데도 낮춘다니, 그러면 지방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다음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현재 지방세는 구조면에서 재산 보유세 위주다 라고 기초연설에서 말씀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금은 취득세, 등록세 등에 과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전체 세입 면에서 작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를 들어보면 담배소비세가 161억인데 재산세는 50억, 종합토지세는 81억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해도 담배소비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과세 시기를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 시·군에서는 지방세 세입이 6월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이월금 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상 이월금이 현금 재원입니다.

잉여금도 그것이 어디로 달아나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이 연초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이월금이라고 하면 마치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저하고 견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나갑니다. 8월달에 주민세가 나가고, 또 10월달에 종합토지세가 나가고, 그리고 12월달에 또 자동차세가 나가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연초에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특히 상반기에 각종 사업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다음 지금 체납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금 체납세가 약 220억 됩니다. 이것을 받을 재주가 없습니다.

직원 할당제를 하고, 또 포상제를 실시합니다만 전혀 크게 체납세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못 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무인 납세 의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뭔가 세무 경찰권이라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체납세 받으러 가면 아파트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돌아와야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뭔가 정부에서 변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방을 좀 살리려고 하면 뭔가 의지를 가지고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 임성일 박사(발표자)

먼저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정부가 매우 보수적인 견해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보면 상당히 원만하고 잘 해온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지방채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채 상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 대비로 볼 때 원리금 상환이죠. 4년간의 평균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상당한 하나의 시금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경제도 커져 가고, 그리고 분권화가 되다 보니까 그 잣대만을 쓰기에는 앞으로 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방재정을 하고 지역 경제를 만질 때 가장 통계적으로 미비된 부분이 뭐냐 하면, 1인당 주민소득입니다.

사실 이것이 모든 통계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지방의 발전을 저

해하는 부분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지역간의 감정 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되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기획예산처 장관님이든, 기타 중앙 정부에서 관계 국장들이 이야기 할 때는 다 그냥 끄덕이지만 몇 년째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개인도 개인이 빚을 질 때 그것이 자산 총액이든지, 내가 1년에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2개 중의 하나입니다.

남들에 비해 잘사느냐, 못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골동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이 축적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이 사람이 직업인으로서 1년에 3,000만원을 받는 것이냐, 5,000만원을 받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주는 액수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소득이 추계가 된다면 이 개인 소득이라는 것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재원에 어떤 형태로든지 녹아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좋은 시금석이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고, 선진국에서 많은 나라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현재는 GRP를 쓰지만 소위 GNP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도 단위, 광역 단위에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은 생산 측면입니다.

예컨대 울산이 GRP가 매우 높게 나오더라도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서울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소득의 3면 정가의 원칙에 의해서 생산·소득·지출이 다 같이 평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없으니까 이것도 결국은 상당히 좋은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구시가 GRP의 12%를 지방채로 발행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10%에서 15%가 테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저뿐만 아니고 다른 실무자나 관계자 분들이 우리 학술계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방세 중의 몇 퍼센트, 세입 예산에 대해서 총 몇 퍼센트하는 등의 이 부분에 대한 컨센스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GRP에 가능한 한 10%를 넘어간다면 조금 문제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투·융자 심사 부분은 제가 별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제도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업 하나하나에 대하여 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수없이 투입되고 오랜 기간이 걸려야 됩니다.

정확한 감리를 하든지, 평가를 하는 공신력이 있는 전문기관의 한 부분을 투·융자 심사 위원회에서 추인을 해 주는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법 따로, 실제 따로 처럼 그렇게 공신력을 갖고 투·융자 심사를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몇 년간의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광양시의 이 의원님이 지방의 과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박상우 교수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중앙과 지방간의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수직적 불균형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지방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이 필요한 부분이고, 기획예산처나 재정부 입

장에서는 줄만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양쪽의 공감대는 뭐냐? 그러면 줄만큼 줬다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보라는 것이고, 지방에서는 모자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서로 쌍방이 대화할 수 있는 장을 하나 펴줘야지, 정말 양쪽이 줄만큼 준 것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기능 이양을 하면서 지방의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그것이 교부세 15% 인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의문을 갖는다면, 여기서 포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쌍방의 공동의 장을 좀 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방세를 이양할 때도 광역이냐, 기초냐에 따라서도 천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논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원님께서 2할 자치, 이렇게 말씀 하셨지만 일본은 항상 그 말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3할의 자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전체 세입에서 지방세가 3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상당히 전보다 만족해서 5할 자치라고 봅니다.

40% 자치단체입니다.

그것은 뭐냐, 전체 내가 쓰는 돈 중에서 40%는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OECD 국가를 볼 때 영국과 같은 경우는 지방세 세목은 단 한 개입니다. 95%는 중앙정부가 국세를 가지고 있고, 5%가 지방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소위 우리로 말하면 보조금 재정 이전을 가지고 지방이 주로 활용합니다.

남의 나라를 이렇게 선불리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출 면에서 보면 약 7:3으로 지방이 많습니다. 경찰자치, 교육자치, 다 있습니다.

국가간의 비교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잘 만들어도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간에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보조금을 아무리 깨끗하게 줘도 서로 불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태리나 영국과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OECD 국가지만 재정이전제도가 매우 많은 나라입니다.

그에 비해서 스칸디나비아 3국은 지방세 소득과세에 있기 때문에 세수 자체가 50% 이상이 지방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적인 해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볼 때는 향후 몇 년 사이에 현재의 8:2 조세 구조에서 7:3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7:3으로 갈 때 득실을 계산해 보면 어떤 데는 더 덕을 보고, 또 어떤 데는 덕을 못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제도로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는 교부세가 15% 인상되었지만 사실 그 15% 인상의 수혜는 자치단체별로 천차만 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효율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봐 주느냐, 이것이 큰 초점인 것 같습니다.

○ 이정문 시의회의원(광양시)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체 100%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3~4만 규모의 중소 도시는 행정 비용이 전체 예산 규모의 50%, 60%를 차지하고, 남은 얼마 안 되는 재정규모를 가지고 균형발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3~4만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지원 대책이 있으며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나 하는 겁니다.

○ 임성일 박사(발표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당국에서 오신 분들이 좀더 좋은 답변을 주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248개 단체가 사실은 특수성이 유형화할 때 여러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제 역량을 넘어서는 것 같아서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수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이 적자가 안 난다, 또는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지원율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밖에 관계부처간에 충분하게 협의가 안된 지방교부세 15%가 여러 가지 경로로 지방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과세시기 조정, 조세 구조의 개정 부분은 상당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월이 수시로 자꾸 바뀌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아까 처럼 6월달까지 세가 안 들어오는 것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에 추경이 많은 것은 지방의 원초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가 양여금부터 안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해야 되고, 도에서 추경을 안 하니까 시·군에서는 못하는, 그러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삼길 과장(행정자치부 재정과)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취약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국세로 갖고 있는 것을 빨리 지방세로 넘기면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니냐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 물으신 것 같아요.

주세, 전화세도 빨리 지방으로 넘겨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주세, 전화세는 양여금으로 해서 전부 지방재원으로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세 받으면 서울 시민들이 술 먹는 것이 훨씬 많아서 서울시는 엄청나게 돈이 많아지고, 지방은 막걸리를 많이 먹는 데, 여기에는 세금이 안 붙으므로 오히려 돈이 적어집니

다.

그래서 세금만 단순히 국세를 지방으로 넘긴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라는 것은 자기 주민이 낸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래도 그 돈만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재원으로 국가에서 받는 것을 지방에 보태주고 있는 것이 소위 보통교부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를 지난번에 13.2%에서 15%로 올렸는데, 그렇게 조금 올라간 돈이 우리 금년도 예산에서 따지면 약 1조 1,814억 정도입니다.

지방교부금 또 거기서 교육재정도 올랐으니까 더 오르고, 이렇게 뺏기고 하니까 국가에서 쓸 돈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고 보조율 인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행자부 예산계장은 지금 기획예산처에 가서 국고 보조율의 일방적인 인하는 안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행자부 장관님 명의로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은 얘기할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군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교부세 주는 것을 지금 교부세 가는 방법 같은 것을 따지면 경기도는 10개 시·군에 교부세 못 받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그쪽에서 내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얘기될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충분하게 자치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이 약한 자치단체를 근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런 문제를 논의해야 될 문제이지 행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국회도 있고, 국회가 전체 체크하는 얘기니까, 또 지금 하고 있는 제도도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것도 많이 보전해 준 제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또 교부세만 해도 상당하고, 양여금도 그런 의미에서 양여금 가져와서 못 사는, 소위 기반시설이 약한 자치단체에 돈이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케치프레이즈가 ‘균형있는 발전보다 개성있는 지방자치발전’이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못 살고 잘 살고를 인정하고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특성 있게 살릴 것이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할까의 문제는 앞으로 논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